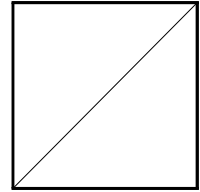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53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7. 22. (제 14 차)

의
결
사
항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7. 22.

1. 의결주문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임원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제3항,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제2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항 및 제21조(과태료)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1항 및 제2항,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및 제19조(과태료 부과에 제척기간)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0.5.14.)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

<별지>

(주)핀옥션소셜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핀옥션소셜대부 : 2020. 7. 27.부터 2021. 3. 13.까지(7.5월) 영업 전부정지 및 과태료 160만원 부과
- 정지 업무 : 대부업(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관련 모든 영업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전부정지 기간에도 다음 업무는 허용

-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금의 수령
- ②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한연장금액이 대부잔액 이내로서 이자율이 종전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조건의 기한연장
- ③ 문자메시지 및 전화(내전)를 통한 단순정보(연체사실, 연체금액, 계좌번호,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안내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
- ⑤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채무확인서 발급 등 제증명서 발급
- ⑥ 영업정지 전 채권추심을 위해 법적 절차를 착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
-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등 업무
- ⑧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2. 조치사유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주)핀옥션소셜대부는 2018.8.14.~2019.10.31. 기간 중 개인 차주 14명으로부터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 (연 24%)을 초과*하여 총 6,177,513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의4

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핀옥션소셜대부는 2018.5.31.~2019.11.29.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주)◆◆◆ 및 (주)○○○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대부 196건, 500억 6백만 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주)핀옥션소셜대부는 2018.12.28. ○○○등 3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9.4.1.~2019.5.20. 기간 중 동 임원이 퇴임하고 ○○○ 등 2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 계 법 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을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 8. (생략)
- ④ ~ ⑤ (생략)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⑦ ~ ⑧ (생략)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채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생략)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 ⑧ (생략)

<별표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1.~2. (생략)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11. (생략)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7.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18.~25. (생략)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부과·징수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생략)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생략)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 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3. (생략)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 9. (생략)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 14. (생략)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1차	2차	3차
다.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7조(변경등록)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한정한다.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7. 기관경고
가. (생략)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2) (생략)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6) (생략)
8. 기관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바. (생략)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생략)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사.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 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는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 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 (4) (생략)

나. 감경 사유

(1) ~ (3) (생략)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 (9) (생략)

5. (생략)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회사명 : (주)핀옥션소셜대부

2. 제재조치일 : 2020. 7.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7.5월, 과태료 160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주)핀옥션소셜대부는 2018.8.14.~2019.10.31. 기간 중 개인 차주 14명으로부터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 (연 24%)을 초과*하여 총 6,177,513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8.5.31.~2019.11.29.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주)◆◆◆ 및 (주)○○○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168명에게 대부 196건, 500억 6백만 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3)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8.12.28. ◆◆◆ 등 3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9.4.1.~2019.5.20. 기간 중 동 임원이 퇴임하고 ○○○ 등 2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3	02-3145-8272